

노동자운동연구소

Issue Paper

2011-2

북아프리카에 부는 변화의 바람, 노조 민주화와 젊은 비공식 노동자들의 운동

1940년대 튀니지의 식민통치에 반대하여 쓰여진 이 시는 2011년 재스민 혁명을 이끌어낸 튀니지 민중들이 거리에서 구호로 외치며 되살아 났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민중들보다도, 때로는 운명보다도 강고해 보였던 이 지역 독재자들의 카르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현재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계기 삼아 지역 노동자 운동의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민주화 시위에 이르게 된 경제, 역사,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소개할 것이다.

현재 리비아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혁명적 시위에 대한 기사를 압도한 나머지,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약간 시들해 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의 투쟁은 지역 민중들과 노동자 운동의 진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었다. 본 보고서는 리비아 주위의 세 나라, 즉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시위를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민주화 시위에서 노동자 운동이 끼쳤던 영향과 역할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1.04.04

조은석 연구위원

sussertod@gmail.com

임월산 국제국장

limwolsan@gmail.com



*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는 모두 리비아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노동자 운동의 개괄적 현황

중동 국가 일람

국가	결사의 자유	노조활동 보장	단체협상권	파업권
Bahrain	유일노조		없음	
Iran	무슬림 노사협의회		사전허가 필요	공무원 파업 금지
Iraq		노조선거 개입(2009)		
Israel				
Jordan	유일노조		없음	허가제
Kuwait				공무원 파업 금지
Lebanon		노조선거 국가 관리		
Oman	유일노조			제한적
Palestine				
Qatar				제한적, 공무원 금지
Saudi Arabia	금지			금지
Syria	유일노조			제한적
UAE			없음	공무원 파업 금지
Yemen	유일노조			제한적

북아프리카에 비하여 중동 지역의 노동자 운동의 현황은?

북아프리카 국가 일람

국가	결사의 자유	노조활동 보장	단체협상권	파업권
Algeria	제한적		제한적	
Egypt				승인 필요
Libya				
Morocco				
Sudan	제한적		제한적	제한
Tunisia				승인 필요
Western Sahara*				

* 분쟁지역으로서 대부분 모로코 왕국이 지배하고 있다. 70년대부터 무장투쟁을 전개해 왔던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Polisario Front)은 이 지역에 독립 공화국 건설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 국가는 석유 산출 여부에 따라 국가 간 빈부격차가 매우 큰 특징을 지니며(최빈국 예멘에서부터 초부국 카타르, UAE 등), 중동지역 전체 실업률은 13%, 청년실업률은 25%에 달할 정도로 실업률이 높다.

이 지역 노동자 운동은 1920년대 식민통치 반대 투쟁을 통해 등장하였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동/북아프리카의 노동조합의 권리는 매우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여성, 이주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튀니지

재스민 혁명

1월 14일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과 그 가족의 망명으로 귀결된 튀니지 민중혁명의 도화선은 한 청년 노점상의 분신이었다. 튀니지 중부의 소도시 시디 부지드(Sidi Bouzid) 거리에서 무허가로 과일을 팔던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지난해 12월 경찰 단속에 걸려 청과물을 모두 빼앗겼다. 그는 시청을 찾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국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자 12월 17일 청사 앞 도로에서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부아지지의 소식이 퍼지자 시디 부지드의 거리는 시위대로 뒤덮였고, 1월 3일 그의 사망을 기점으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분신한 부아지지의 장례가 1월 5일 치러진 후 하루가 지난 1월 6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청년들의 시위를 지지하며 파업을 벌였다. 튀니지노총(UGTT)는 총파업을 통해 헌법 개정과 노동조합 지도부 석방을 요구했다. 식료품값 인상과 최악의 실업난은 시민들의 저항 열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시위는 이후 '독재 타도'를 전면에 내걸게 됐고 튀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이름을 따 '재스민 혁명'이라는 이름도 얻었다.

반대세력에 대해 벤 알리 정부는 철저한 탄압으로 대응했으나 시위는 수도 튀니스까지 번지면서 정권을 위협했다. 벤 알리 대통령은 차기 대선 불출마, 내각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 등

북아프리카에 부는 변화의 바람, 노동자운동의 역할은?

유화책을 내놓으며 민심 수습에 나섰으나 저항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1월 14일 하야 후 망명을 선택했다.¹ 내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대 78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경찰의 발포에 의한 것이다.

14일 벤 알리의 도주 후 UGTT는 민중의 대표자로서 과도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벤 알리 추종세력은 주도권을 행사하며 모든 야당세력과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과도내각을 구성하였으나 UGTT는 과도내각에 파견한 노동자 대표자를 사퇴시키고 UGTT의 국회의원들 또한 자리를 내놨다. 이후 전여당세력의 척결을 주장하는 시위와 함께 26일에는 튀니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스팍스에서 총파업이 시작됐다. 파업시위는 28일까지 3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됐다.

혁명에 이르게 된 원인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튀니지는 1970년대 들어 부르기바 초대 대통령이 수출주도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미약한 내수 기반 때문에 수입대체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집약 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고용효과도 미미하였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중반 외채위기를 겪게 된 튀니지는 석유수출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개혁은 1978년 총파업, 1983년과 84년 식량폭동 등의 저항을 겪게 된다.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이 침체되고,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부르기바 정권의 코포라티즘은 붕괴되기 시작한다.

1986년 IMF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사유화 등의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잠재적인 저항의 근원을 파괴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 때 등장한 세력이 바로 벤 알리 정권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1987년 벤 알리가 무혈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을 당시 했던 약속이 2011년 사우디로 망명가기 전 몇 주간 취했던 유화적 제스처와 무척이나 닮아 있다는 점이다. 벤 알리는 부르기바 정권이 무시한 법치확립을 내세우며 집권하였는데, 당시 알제리에서도 유사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벤 알리는 집권 여당을 민주헌법회의(Reassemblement Constitutionel Democratique, RCD)로 쇄신하고, 정치범 석방, 고문금지에 관한 UN헌장 비준, 종신 대통령직 폐지, 정당설립과 결사에 관한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989년 선거조작을 통해 여당이 100%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끝이 나게 된다.



북아프리카에 부는 민주화 바람, 노동자운동의 역할은?

¹ '재스민 혁명' 튀니지 피플 파워에 23년 독재 몰락,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1/h2011011621090022450.htm>)

UGTT는 그때까지 예산상의 자율성을 빼앗기고 지도부가 제거되면서 정권에 굴복한다.

다른 아랍세계의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벤 알리 역시 지난 수십 년간 이슬람 세력을 핑계 삼아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해 왔다. 이들은 이슬람 세력의 의도와 세력을 부풀려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대신 자신들의 집권을 통해 지역전체의 안정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서방세계에 독재를 정당화해 온 것이다.²

벤 알리 정권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2000년대 들어 관세와 상품수출 규제를 풀면서 EU와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1990년대 들어 튀니지는 이라크, 사우디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에 파트너로 자리매김 한다. 벤 알리의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효과는 표면상으로는 놀라웠다. 유럽 주변부 국가에 필적하는 GDP, 낮은 공공부문 부채, 인플레이션 통제, 국가신용도 회복 등. 총 160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고, 2007년 튀니지 거래소의 상위 50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57억 달러에 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면적 성공 뒤에 일반 노동계급이 겪는 고통 역시 막대하였다. 높은 실업률, 불평등 심화, 보조금 철폐, 주거비용 상승, 복지 후퇴 등이 그것이다. 부는 일부 경제 엘리트와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해외 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은 노동자 조직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공교육과 보건의료 시스템이 사유화됨에 따라 그 기능이 심각하게 상실되었다. 또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튀니지 정부에 균형재정을 위해 보조금 삭감을 권고하였다.

2011년 초 민심 이반을 일으킨 요인으로는 높은 실업률과 식료품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2008년 평균 실업률 14%의 두 배가 넘는 31.2%에 달하였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혁명은 아랍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유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리비아, 바레인, 예멘 등이 그 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석유, 가스, 천연광물 산업과 관광산업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대”를 향유하는 지배계급과 민중들 사이의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져 왔다는 것이다.

이들 “지대” 산업은 대개 수출산업으로서 고용 효과는 극히 미미하며, 매우 특수한 경제구조(석유 경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내수산업은 저발전 상태에 머무른뿐더러, 금융과 기술 서비스 산업은 대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해 통제된다. 튀니지 경제 역시 해외 자본에 편향적인데,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5개 국가 중 가장 해외자본에 대한 제한이 적은 나라가 바로 튀니지다. 그 결과 자유무역이 확장되었고, 투기세력에게 튀니지는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 중에서 석유경제와 경제적 불평등, 식료품 가격 양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제리를 다루면서 상술하겠지만,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공히 나타나는 ‘관광산업’이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 밝혀둘 필요가 있다. 튀니지의 “경제 기적”을 이끈 동력 중 하나가 관광산업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관광산업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과 소수 엘리트에게만 돌아갔으며, 이들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튀니지 경제 전체로 보자면 이는 주거비용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을 낳았고, 농지를 관광지로 전환함에 따라 농산품의 가격 변동폭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식료품값 양등에 따른 불만의

² 로버트 고텍(Robert Goddec) 주 튀니지 미국 대사는 “이 지역에서 알카에다를 비롯한 다른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unisia's Jasmine revolution: A flower that could be crushed, the Guardian]

표출이 이번 혁명의 경제적 도화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노동자 운동과 노동조합의 역할

튀니지의 노총은 UGTT(Union Générale Tunisienne de Travail)가 유일한 공식 노총이다. 조합원 총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10~15% 가량의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⁴ 튀니지의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다. 튀니지 노동법은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조 결성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노총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또 외국국적 노동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선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노사정 3자 협의에 의한 가이드라인 설정 후 3년마다 한 번씩 노사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파업권은 보장되어 있으나, 모든 파업은 공식 노총인 UGTT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며, UGTT는 기층 노조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업 기간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불법 파업에 연루된 노동자는 3~8개월에 이르기까지 수감될 수 있다.

원래 UGTT는 프랑스 식민 통치하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프랑스 노총인 프랑스노동총동맹(CGT)에 대항하여 건설된 조직이다. UGTT는 당시 부르기바(Bourguiba)가 이끌던 신헌법당(New Destour Party)과 동맹관계에 있었으며, 이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에 의한 차별에 맞선 동맹의 성격을 띄었다. 독립 이후에도 튀니지 노동자 운동은 부르주아 개혁정당에 가까운 부르기바(Bourguiba) 정권을 지지하였는데, 자본가들 역시 부르기바를 광범하게 지지하였다. 신헌법당은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한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경제적 자유화와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국유화,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국가 포섭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집트와 알제리 등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 실험에 영향을 받아 튀니지는 1964년부터 얼마 동안 농업 협동조합과 공공부문의 산업화를 기초로 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튀니지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치에 지지를 보냈으나, 개혁으로 인한 성과는 거의 없었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실험은 중단되고, 대신 코포라티즘이 득세하게 된다.

UGTT의 합의주의, 나아가 벤 알리 정권 이후부터는 친정부 성향의 행보를 보였지만, 대규모 파업을 비롯해 등의 투쟁을 벌인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77년 크샤르 헬랄(Ksar Hellal) 지역의 국영 섬유회사 파업과 동년 인산염 광산 파업 등에서 승리하였으며, 1978년에는 전국적 총파업을 시도하였다. 또 2007년 재스민 혁명에 앞서 가프사(Gafsa) 지역에서 벌어진 투쟁은 국영 인산염 광산에서 벌어지는 부패한 고용관행에 청년 실업계층을 중심으로 벌어진 파업이었다. 정부와 유착된 UGTT 중앙 지도부에 절망한 노동자들은 UGTT 가프사 지역 본부를 장악하고 6개월간 투쟁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2009년 대선에서 89.62%의 찬성률로 다섯 번째로 재선된 벤 알리는 철저하게 반대세력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벤 알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젊은이들이 정치적 자유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이전까지 정권에 충성하던 UGTT의 지도부에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로 튀니지의 노동자 운동은 민중봉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³ Bulent Gokay, Neoliberal western policies led to uprisings, <http://www.publicserviceeurope.com/article/99/neoliberal-western-policies-led-to-uprisings>

⁴ 2004년 설립된 SJT(Union of Tunisian Journalists)라는 독립노조도 존재.

사실이다.

12월 17일 부아지지의 분신은 알자지라 방송과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졌으나, 이를 오프라인에서의 투쟁으로 만든 것은 시디 보우치드 지역본부였으며, 벤 알리 사퇴 이후 UGTT는 과도정부 구성에 있어 자신의 요구를 내거는 등 튀니지 사회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방향타를 쥐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UGTT는 애초 집권여당인 입헌민주연합(RCD)에서 이탈한 모하메드 간노우치(Mohammed Ghannouchi)가 이끄는 임시정부(통합정부)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민중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통합정부에서 철수한 후 RCD의 해체와 장관급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화 혁명 이후 튀니지 노동자 운동의 전망

비록 약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튀니지의 지배계급은 권력을 쥐고 있다. 혁명을 이끌었던 조직된 노동자 운동과 튀니지 좌파, 그리고 이슬람 세력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형국이다. 혁명 이후 UGTT의 영향력 역시 어느 정도 발휘되고는 있으나 정국을 주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벤 알리의 퇴진 이후 열린 새로운 정치적 공간 속에서 다양한 세력이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2월 2일에는 벤 알리 정권 아래서 인정을 받지 못한 튀니지노동총연맹(Fédérat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 CGTT)이 임시행정부에 법적 승인을 요구하며 출범을 발표했다. CGTT의 성명서를 보면 현 UGTT 집행부의 지난 23년간의 친정부 행태를 비판하며, 정치권력의 "일당" 모델에 조응하는 노동자 운동의 "단일노총" 모델 종식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⁵

간노우치 반대 운동에서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경향성을 지닌 세력들이 출현하고 있다.⁶ 알 나다(Al Nahda)와 1.14전선이 그 대표적 예이다. Al Nahda는 벤 알리 정권 아래 탄압을 당하던 중도 이슬람 조직이며, 1.14전선은 좌파 정당과 조직의 연합체다. 1.14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은 노동좌파연맹(League of the Labor Left), 나세르 노동자 운동(Movement of Nasserist Unionists), 민주국민운동(Movement of Democratic Nationalists), 민주국민당(Democratic Nationalists, Al-Watad), 독립좌파(Independent Left), 튀니지 공산노동당(Tunisian Communist Workers Party), 그리고 애국민주노동당(Patriotic and Democratic Labor Party) 등이다.⁷

튀니지의 노동자 운동이 앞으로 국가권력으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민주정부 구성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서방세계의 리비아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패권 다툼이 향후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룰 것이다. 특히 튀니지 노동자 운동이 이슬람 세력과의 정치적 관계 형성을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⁸

⁵ TUNISIA: CGTT UNION ASKS TO BE LEGALISED (<http://www.ansamed.info/en/news/ME.XEF64476.html>)

⁶ Class lines sharpen in aftermath of Tunisian uprising (<http://pslweb.org/liberationnews/news/class-lines-sharpen-in.html>)

⁷ 1.14전선의 발족선언문은 RCD해체, 간노우치 퇴진, 전 정권 인사 재산 몰수, 주요 사유화 기업 재국유화,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http://pslweb.org/liberationnews/news/tunisia-14-january-founding-statement.html>)

⁸ Tunisia, Egypt, Yemen... A post-Islamist revolution (Le Monde) (http://www.world-religion-watch.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56:tunisia-egypt-yemen-a-post-islamist-revolution&catid=58:Translation%20Database%20of%20Translation%20Examples&Itemid=73)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요구는 명확했다. 정권퇴진, 계엄법 철폐, 고문금지, 자유선거 실시. 그렇지만 결국 민중들이 공권력의 힘을 뚫고 정권 전복에 이르게 하였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불만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튀니지의 노동자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직면한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열망을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구체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일일 것이다.

이집트

1.25 혁명의 전개

1월 25일부터 교박 18일 동안 이집트인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수도 카이로의 타르히르(해방) 광장과 이집트 전역에 모인 시민들은 경찰과 정권지지자들, 무바라크 대통령이 고용한 용역강패들과 충돌하여 300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월 2일의 전투가 특히 심각하였는데, 말과 낙타를 탄 정부지지자들이 타르히르 광장으로 난입한 것이다. 군부는 시위가 벌어지는 기간 동안 중립을 지켰고 때로는 민주화 세력과 친정부 세력 간 싸움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사병들과 일부 장교들은 시위대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군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다. 2월 9일경부터 수 만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노동자 파업은 시위대에 힘을 실어 주었고, 마침내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던 무바라크는 2월 11일 사임을 발표하고 가족과 함께 수도를 떠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화책의 일환으로 사임으로부터 12일 전 임명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은 무바라크가 모든 권력을 군최고위원회에 이양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한다. 같은 날 군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대선”을 치르고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군부가 개혁과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발표하도록 압박하는 시위가 3월까지 이어졌다. 군부는 민간 정치인에 권력을 일부 이양하였고,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고, 정치적 자유 확대와 대선과 총선 일정을 앞당길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3월 19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41%의 투표율에 77.2%의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혁명의 기원: 30년간의 신자유주의와 독재정치

반체제 및 청년 단체들에 의해 폭로된 경찰의 부패와 인권유린에 대한 대중적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이집트에서 불리는 1월 25일 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애초 계획은 이집트 경찰의 날이던 1월 25일에 내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시위대의 요구 중에는 최저임금 부활,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 억압적인 계엄법의 철폐(아래에서 상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집트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격차의 확대와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이 되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제출되었다. 집회를 조직한 이들은 1월 25일에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계급 양극화, 독재정권과 미국과의 동맹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집트의 현재 정치, 사회적 구성의 기원은 1970년 가말 압델 나세르 초대 대통령의 죽음 이후 혼란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세르의 민족주의적 외교정책과 인민주의적 독재통치가 해체되었고, 1970년대 나세르의 후임자인 무함마드 안와르 사다드 대통령은 나세르의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으로 등장한 신도시자본가계급과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외국자본에 개방했다. 또한 사다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어, 미국의 중동 패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미국, IMF, 세계은행 등이 전파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공기업의 사유화를 시작하고, 보건의료, 교육, 공공 부문 임금,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을 삭감했다.

1981년 사다드 대통령 암살 이후 정권을 장악한 무바라크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했다. 무바라크 치하 30년 동안 시행된 경제개혁은 나세르가 도입한 식량 보조금 삭감, 토지개혁 역전, 농촌지역 부동산시장 자유화, 공공기업 사유화, 국제금융시장과 외국투자에 대한 추가 개방, 세제혜택과 미약한 노동기준이 적용된 경제특구 건설을 그 내용으로 한다. 토지개혁의 역전으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떠났고, 도시는 곧 도시빈민과 실업자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공공기업의 사유화와 함께 정리해고, 실질 임금 축소, 노동조건 악화, 노동유연화 등이 도입되었다. 2002년의 도입된 경제 특구법은 이러한 노동조건 악화를 심화시켰다.

무바라크 정권은 소수 자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공공기업 매각이나 정부조달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 재계 엘리트들이야말로 이집트의 놀라운 경제성장(2005년~2008년 사이 평균 GDP 성장률 7%)의 핵심 수혜자다. 그렇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계급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집트 국민의 약 40%는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한다. 100여 개 가문이 이집트 부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실업률은 10%에 달하고, 대졸 청년 실업률은 30%이다. 취업인구 중 60%는 비공식부문에 종사한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통해 소수 엘리트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 1981년 사다드의 암살로 인해 시행된 비상계엄을 테러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하며 30여 년 동안 유지했다. 비상계엄법률은 경찰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유예했다. 또한 검열을 합법화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며, 승인 받지 않은 정치조직의 형성을 금지했다. 2010년 11월에 시행된 지난 총선의 부패상은 잘 알려져 있다. 2005년 총선에서 크게 선전한 이집트의 최대 야당인 무슬림 형제단은 광범위한 탄압을 받았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제한당하고, 당원과 지지자 천여 명이 구속되어 선거권을 박탈당했으며, 유권자들의 투표권은 원천 봉쇄되었다. 이렇게 구조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광범위한 정치탄압은 이집트 민중의 더욱 격렬한 분노를 불러왔고 결국 1.25 혁명을 촉발했다.

이집트의 청년들

이집트의 청년들은 혁명에 핵심 역할을 했다. 주류 언론은 이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집회를 조직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렇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강조함에 따라 청년층의 집회 참여는 아무런 기획 없이 조직되지 않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묘사된다. 물론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 과거에 집회 참여 경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정치적 세력으로 조직화해 왔던 집단도 분명 있었다. 예컨대 1월 25일 첫 집회를 공동주최하고, 이후 18일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한 4.6 청년운동(April 6 Youth Movement)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의 활동은 2008년 4월 나일델타 주변에 위치한 섬유업 중심지에서 일어난 노동자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또 다른 단체로는 경찰들이 몰수한 마약을 서로 나누어 갖는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 경찰한테 살해당한 소기업인의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도 있다. 이 단체는 결성 직후 광폭한 경찰의 폭력과 부패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투쟁으로 확산됐다..

무바라크 퇴임 이후 이들과 다른 젊은이들은 혁명청년연합(Coalition of the Youth of the Revolution)을 결성하여 군최고위원회의 협상에 나서며, 시위 조직화를 진전시킨다.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새 헌법 작성, 계엄법 철폐, 결사와 언론의 자유 보장, 여당 해체 및 자산몰수, 정치범 석방이 이들의 요구였다. 이 연합의 일부 그룹은 이집트 사회민주당(Egyptian Social Democratic Party)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4.6 청년운동을 포함한 다른 그룹은 정당 정치를 진입하기 보다는 군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이집트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이때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사업장에서 최소 50명의 노동자를 조직해야 하며, 모든 노동조합은 이집트노총에 소속된 23개 산별 노조 중 하나에 지부로 들어가야만 했다. 1957년 설립된 이집트노총은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집트노총 외부에서의 조직화 시도가 발각되면 해당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00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사회질서법과 "일반 윤리"를 따르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호한 법률은 곧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또한 합법 파업을 벌이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먼저 이집트노총 집행위원 3분의 2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파업 10일 전 이를 통보하고, 파업 기간을 설정하여 알려야 되는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는 "전략 부문"의 파업을 막을 권한도 지니고 있는데, 이 "전략부문"에 속하는 분야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운송과 제빵소까지를 포함한다.⁹ 이집트의 특별경제구역(SEZ)에 노동조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2002년 SEZ설치법에 따라 SEZ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조직화와 관련된 노동법을 따를 의무를 면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억압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이집트 노동자들은 이집트 노총이라는 공식체계 밖에 파업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바라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투쟁해 왔다.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17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1,900건이 넘는 파업 등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 2004년부터 이어진 파업은 2008년 4월 섬유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절정에 달해 4.6 청년운동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반대 대중투쟁과 더불어 이집트

⁹ <http://survey07.ituc-csi.org/getcountry.php?IDCountry=EGY&IDLing=EN>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집트사회에 저항의 문화를 심었”고, “시민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친 노동자들의 행동은 민주노조운동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2007년 12월, 5만 5천 명의 지방 세무원 파업의 결과, 노동자들은 경제적 요구를 쟁취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세무원 독립 노조라는 이집트노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그리고 1.25혁명이 한창 무르익던 1월 30일, 독립 노조들과 노동자위원회가 이집트노총으로부터 독립된 이집트독자노조연맹(EFTU)의 결성을 발표했다.

1월 25일 혁명 기간 동안 이집트 노동자들이 과거와 같이 독립적 파업위원회를 구성해 거리에 나섰다. 2월 9~11일에 다양한 업종(섬유, 군용품, 우편, 운송, 병원, 행정 등)에 종사하는 공공, 민간부문 노동자들 수만 명이 파업에 나섰다. 타흐리르 광장에서 모인 시민들은 이러한 노동자의 행동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권을 압박하는 데 파업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했다. 1. 25 혁명은 독립노조의 형성에도 좋은 계기로 작용하였다. 1월 30일, 독립 노조들과 노동자위원회가 이집트노총으로부터 독립된 이집트독자노조연맹(EFTU)의 결성을 발표했다.

2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중에는 자신의 요구를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 지은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노동자는 무바라크의 사임을 요구했다. 일부는 근본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예컨대 철강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 무바라크 대통령과 정권과 관계된 모든 인사들의 즉각적인 사임, 2) 정권 인사 등 모든 부정부패 인사의 재산 몰수, 3) 이집트노총 해산과 민주노조 결성, 4) 매각, 폐쇄, 사유화된 공기업의 몰수, 노동자 민중의 통제를 통한 공공부문 국유화, 5) 생산, 가격, 분배와 임금을 감시할 수 있는 직장위원회 구성, 6) 모든 사회집단들이 참여하는 제헌의회 소집.¹⁰ 새롭게 결성된 이집트독자노조연맹의 요구는 월 최저임금 1,200이집트 파운드(1984년에 규정된 현 최저임금의 약 4배 수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보장, 보건, 주거, 교육, 연금, 복지,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보장을 요구했다.¹¹ 2월 13일 이집트독자노조연맹은 노동자들에게 이집트노총을 탈퇴하고 독자적 노조를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¹²

2월 무바라크의 하야 이후에도 파업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은행을 닫고, 대중교통을 멈추고, 수에즈 운하의 운송속도를 떨어뜨리고, 섬유공장 가동을 멈추고, 인플레이션에 한참 미달한 임금상승률을 보전하기 위한 임금상승과 경영구조의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경찰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서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에 나서며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이집트독자노조연맹은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3월 2일 열린 예비대회에는 수백 명의 노조활동가가 참석하였다. 이집트독자노조연맹에 따르면 무수한 활동가들이 이집트노총 외각에서 조직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거의 조직화가 되어있지 않던 섬유, 공공운수, 체신, 철강 노동자들 역시 독자노조연맹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¹³

¹⁰ <http://socialistworker.org/2011/02/10/workers-take-center-stage>

¹¹ <http://www.unionbook.org/profiles/blogs/egypt-founding-declaration-of>

¹² <http://www.anarkismo.net/article/18851>

¹³ <http://www.egyptworkersolidarity.org/?p=309>

독자노조연맹 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요구와 함께 이집트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의 즉각적인 해체도 요구하였다.

이집트 혁명과 이집트 노동자 운동의 전망

1.25 혁명은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조직화가 강화되고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민주적 개혁 요구를 내건 노동자 운동의 성장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앞에 놓인 과제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설령 이집트 민중들이 이 과업에 성공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이 이양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집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암르 무사(Amr Moussa)는 외부무 장관으로 활동하다 무바라크 정권 동안 아랍연맹의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아랍세계에서 저항의 물결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재계 엘리트의 강력한 공조를 통한 개발을 제시한다. 무사는 또한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유지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편이라,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카드다. 무사는 이집트에 다당제 민주주의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며, 더 자유로운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사 또는 지지율이 훨씬 낮은 엘바라데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들 중 누구라도 정부주도의 개혁을 통해 이집트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집트 노동자와 좌파의 단호한 장기 투쟁을 통해서만 재계와 군부 엘리트의 권력을 해체하고, 이집트 경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역전시키고, 혁명적 변화라는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알제리

튀니지와 이집트에 비해 알제리는 미디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 이유는 알제리의 시위가 앞선 두 국가만큼 고조되지 못하고,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정권의 전복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은 명확하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 16위의 석유 생산국인 알제리(리비아는 17위)에서의 사회변화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미국의 오랜 동맹인 부테플리카 정권이 카다피를 지지하면서 알제리와 부테플리카 정권의 운명이 이 지역 전체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알제리는 또한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강력한 독립노조로 유명한 국가이며, 이들 독립노조는 이 지역 노동자 운동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2010-2011년 시위

최근 알제리에서 나타난 시위의 물결은 2010년 12월 주거권을 둘러싼 데모로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초 설탕과 식용유, 밀가루의 가격이 국제 시세에 맞추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암시장에 대해 새로이 가해진 제약은 이를 부채질하였다. 이 때문에 시위는 더욱 고조되었고, 1월 초부터 몇 주간 알제리 전역에 걸쳐 시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제리인들은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주거공간의 부족, 청년실업, 정부의 부패,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튀니지의 시위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이르면서, 알제리에서도 분신이 이어지며 몇 명이 목숨을 바쳤다. 그렇지만 대규모 시위는 1월 중순을 지나면서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1월 21일 독립노조들과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변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 연합(National Coordination for Change and Democracy, CNCD)를 결성하였다. CNCD는 그때까지는 상당히 자연발생적이었던 대중집회를 부테플리카 정권의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모아낼 방안을 강구하였다. CNCD는 실업, 주택부족, 생필품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알제리의 일부 여당들과 함께 CNCD는 2월 말까지 간헐적인 시위를 조직하였고, 2월 12일 시위에는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시위대가 수도 알제의 5월 1일 광장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시위는 없었다.

1월 이후 알제리 정부는 유화책과 강경책 모두를 동원하여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수만의 시위진압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고, 2월 12일을 비롯 몇 번의 충돌을 겪으며 수 명의 사상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1월 8일 정부는 설탕과 식용유에 대한 세금을 8월까지 임시로 낮추는 데 동의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했다. 2월 22일 알제리 정부는 지난 19년간 시위를 금지하고, 헌법적 자유를 제약하며, 임의 구금을 인정하는 계엄법의 철폐를 발표하였다. 계엄법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시위는 수도 알제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위의 원인

1월의 시위가 근래 들어 최대 규모였지만, 이와 비슷한 자연발생적 시위는 지난 몇 년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2001년 카빌리아(Kabylia) 지방에서는 대규모의 장기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이 지역은 아마지그(Amazigh)로 알려진 베르베르족 영토이다. 2005년 이후 알제리에서는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시위가 일어났다는 통계도 있다.¹⁴ 이러한 소요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국가의 분배 기능이 망가진 데 대한 반응이며, 일반 대중들 역시 기존의 정치체계가 너무도 부패한 나머지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구제책을 도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식할 결과일 것이다.

알제리의 사회위기는 극히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은 2011년 11월까지 평균 5.7%였는데, 농산물 가격은 21% 이상 올랐다. 내전 종식 이후 5년간 노동자의 30%만이 정규 유급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비공식 부문이 계속 커지고, 민간 부문은 점점 임시직으로 채워졌다. 실업률은 30%인데, 청년층의 실업률은 35%에 달한다. 최근 시위에 깊이 참여한 베르베르족의 경우, 경제적 고통에 더해 언어적/문화적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받아온 역사가 있다.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생활수준 하락을 겪은 알제리의 청년층은 규제가 없는 길거리 시장의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 부문으로 유입되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이후 정부는 이들을

¹⁴ http://mideast.foreignpolicy.com/posts/2011/01/09/algeria_s_national_protesta

잘못된 경제정책의 불가피한 결과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시장을 폐쇄하고 세금탈루를 이유로 노점상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부문에 대한 단속은 시위의 또 다른 직접적 추동력이었다.

석유경제

알제리인들이 겪는 가난과 실업이라는 문제는 알제리가 탄화수소 경제(석유경제)에 편향적으로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신자유주의 개혁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알제리에서 유전이 처음 발견된 해는 1956년이며, 1958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알제리 경제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기타 산업의 경우 저발전 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탄화수소 경제는 현재 수출의 95%, GDP의 51%, 전체 노동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알제리는 현재 거의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으며, 대외부채는 거의 없고, 2011년 4%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석유산업에서 창출되는 부는 군부와 정부의 일부 엘리트 그리고 1990년대부터 알제리에 진입한 초국적 석유회사의 손에 떨어질 뿐이다.

알제리의 척박한 토양과 물 부족, 농업부문의 발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세계 식량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6개월간 알제리의 기초 식량 가격은 상승일로에 있었으며, 일부 식품의 경우 50%까지 인상되기도 하였다.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일반 가계에 끼친 부담이 2011년 초부터 일어난 봉기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요르단, 수단, 예멘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러니한 점은 알제리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유가 상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세계적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된 대규모 농업에는 농기계와 운송수단에 석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석유는 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더욱이 유가상승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대처를 위한 각국 정부의 시도와 더불어 식량이 아닌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에 대한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이 역시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하였다.¹⁵ 따라서 유가 상승이라는 현상이 알제리 엘리트에게는 부의 원천이었던 반면 역설적으로 민중들에게는 고통의 근원이 된 것이다.

군부, 내전, 신자유주의 개혁

사회주의 성향의 민족해방전선(FLM) 정부가 1988년 말 무너진 이후 나타난 정쟁과 신자유주의 개혁 때문에 알제리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1988년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부의 전체주의적 성향에 대한 불만이 겹쳐져 대규모 파업과 학생들의 동맹휴업이 전환점이 되었다. 정부는 경찰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충돌이 끝날 때까지 500명이 희생되었고, 3,500명이 투옥되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차들리 벤제디드(Chadli Bendjedid)는 내각 대부분을 해임하고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1989년 2월 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새 헌법을 승인하였다. (그렇지만 이 법에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양보조치로서 이전 헌법에서는 보장되었던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군의 역할은 국방으로 국한되었다.

¹⁵ The oil-food price shock (Nation)

(남성에게만 주어진) 상대적인 정치적 자유의 시기는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 끝이 났다.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인 이슬람해방전선이 1990년 지방선거에서 62%의 지지를 얻고, 이듬해 전국선거에서는 최대 다수당이 되었던 것이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벤제디드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급격히 급진화된 이슬람 세력과의 내전을 시작하였다. 10년간 계속된 내전에서 약 20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이유로 1992년 계엄법이 발효되었다.

내전의 와중에 군부 정권은 IMF와 세계은행의 지도 아래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시행하였다. 1994년 IMF는 외채 조정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였다. 4년간 지속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공공지출을 심각하게 삭감하였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였다. 또한 구조조정, 사유화, 공기업 해체 조치도 취해졌다. 총 450,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해고당했으며, 이 때문에 불만과 가난이 증대되었다.¹⁶ 1986년부터 1999년까지 1인당 GDP는 2,590달러에서 1,550달러로 하락하였다.¹⁷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진 민간부문의 확장과 사유화는 200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정부는 특히 석유산업에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슬람주의 지지세력을 민주적 과정에 참여시키는 대신 광범한 단속을 펼친 것은 해외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통과된 탄화수소법을 통해 무역과 투자 규제가 해제되었고 석유산업에 자유경쟁이 도입되어 국영 석유회사 역시도 경쟁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프랑스의 초민족적기업이 특히 석유산업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고, 착취가 심화되었다.

알제리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알제리의 노동조합법은 다른 아랍세계 국가 대부분의 그것보다는 제약이 덜하지만, 노동조합의 권리가 완벽히 보장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알제리인들은 노동조합 결사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을 등록하기 위해선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20%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록 노조의 경우 단체협상의 권리가 보장된다.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심각하게 제약되어 합법 파업을 벌이기란 매우 어렵다.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선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파업 시작 1주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파업기간에도 생산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과 상품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수 활동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최소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계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온 조항이기도 하다. 더욱이 1992년 선포된 비상계엄조치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이동의 자유를 방해할 의도를 지닌 모든 행위는 국가 전복 행위 또는 테러 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알제리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노총은 알제리노총(General Union of Algerian Workers,

¹⁶ Algeria's Political Economy (1999-2002), 8.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Openings: Lessons from Algeria, 8.

¹⁷ Algeria's Political Economy (1999-2002), 7.

UGTA)으로 알제리가 여전히 식민상태에 있던 1956년 FLN에 의해 설립되었다. UGTA의 애초 목적은 프랑스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통치 기간 동안 UGTA의 지도부는 FLN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긴 하였으나, 1962년 해방 이후 FLN의 국가구조 안에 포섭되게 된다. 공공부문 파업은 불법화되었고, UGTA 지도부의 임무는 노동쟁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되었다. 한편에서 UGTA 하부조직의 활동가들은 FLN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었다. 지도부조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적어도 일부나마 귀를 기울였으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에는 몇 번의 대규모 파업도 기획하였다.

1988년 시위 이후 짧게 지속된 민주화 시기, 알제리 노동자 운동에게 있어 짧게나마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1989년 헌법은 집회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하였고, 복수노조를 가능케 하였다. 1989년 학생운동의 활동을 통해 몇몇 독립노조가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UGTA는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였으며 1991년 군부가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군부를 지지하였다. 계엄법 실시 이후 정부는 이를 독립노조 및 모든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삼았다. 노조 지도자에게는 활동정지와 해고가 다반사였다. 이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과거 독립노조를 승인하긴 했지만, 이들은 단체협상과 사회적 대화로부터는 배제되었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일부 노조의 등록 신청 심사를 연기하거나, 등록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2004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UGTA만을 공식 인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알제리에는 약 20개의 독립노조가 60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UGTA의 공식 포괄 노동자는 130만 명이다). 독립노조는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 특히 강력하다.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알제리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 왔다. 1990년대 동안 UGTA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긴축 정책과 고용약화에 항의하여 수 차례 파업과 투쟁을 벌였다. 2003년 UGTA의 총파업은 석유산업의 경쟁 심화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탄화수소법의 시행을 연기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보건 의료 및 교사 독립노조는 2003년 파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2008년 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었다. 철도, 트럭, 항만, 철강 노동자들 역시 성공적인 파업을 벌인 바 있는데, 이들이 벌인 파업의 상당수는 와일드캣 파업이었다. 알제리 약 20개의 초민족적기업 노동자들은 처참한 노동조건과 노동법 회피 등에 맞서 UGTA 안팎을 넘나들며 투쟁을 벌였다.

시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알제리 노동자 운동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 노동조합이건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이건 거리시위가 가장 강력하게 펼쳐지던 1월초의 자연발생적 투쟁에서 큰 역할을 하진 못했다. 이것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알제리의 소규모 독립노조 중 4개의 노조가 CNCND의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야당과 사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2월 12일 시위를 비롯한 다른 시위를 기획하였다. 그렇지만 CNCND는 1월에 시위를 시작한 대다수 시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 요구안 마련이나 알제리의 미래상을 그리지도 못하였다. 2월 말이 되어가면서 CNCND는 “운동을

재구성"한다는 명분으로 대중동원 기획을 그만두었다.¹⁸ 제1야당인 문화민주 행동당(Rally for Culture and Democracy, RCD)의 경우 3월 초까지 시위 조직화를 이어나갔지만, 수백 명만이 참석하는 소규모 집회에 그쳤다.

알제리 혁명과 알제리 노동자 운동의 전망

CNCD 또는 어떤 재야세력도 알제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부활시키고 혁명적 열정을 다시 불붙이기란 당분간은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알제리에서는 무엇이 이집트와 튀니지와 달랐기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질문해야만 한다. 먼저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12월에서 2월까지 일어난 시위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그 이전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창출해낸 반면, 알제리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대중동원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월의 시위는 많은 점에서 그 규모가 컸을 뿐 과거시위와 "대략 동일"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 요구가 부재하였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이집트에서 정치세력은 애초에 경제적 요구와 함께 부패한 국가와 억압적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내걸었다. 반면 알제리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똑같은 분배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가는 했지만 정치적 요구는 부재하였던 것이다. CNCD는 2월 들어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알제리인들이 소요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년에 걸친 내전 때문에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갈구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광범위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알제리인들의 삶을 위협했던 일상적 폭력을 다시금 불러올지 모르는 장기적 정치 불안정 상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이다.

알제리의 시위가 이전의 상황으로부터 전환점이라기보다는 그 연장선 상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 기간 동안 노동자 운동의 역할이 부재했던 점에 대한 설명이 될 지 모른다. 이집트에서 타흐리르 광장의 대중 시위를 통해 고무된 노동자들은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독립 노총의 설립을 추동하였다.

비록 혁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알제리의 운동세력은 시위를 통해 비상계엄법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작은 승리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화와 노동자 운동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일 수 있다. 부테플리카 정권을 압박하여 그가 약속한 정치적 자유를 말이 아닌 현실에서 쟁취하고, 그를 통해 나타날 성장의 여력을 이용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알제리의 사회단체와 노조에 달려있다.

결론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시작되었다.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공격이 이 세 나라를 비롯한 아랍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번 공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¹⁸ <http://main.omanobserver.om/node/41998>

있지만, 그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분명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독재정권을 지원해 왔던 서방세계는 민중들의 저항과 민주적으로 선출될 정부의 등장이 기대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다. 명확한 것은 서방 강대국들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확립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가 영향력 재확립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의존해 온 기초적인 정치-경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의 사회/정치적 변화를 억누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껏 얻어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민주세력과 노동자 운동이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알제리 CDCD에 참가한 독립 노조와 운동조직들은 세력을 늘려 부테플리카를 압박하여 자신이 약속한 개혁을 수행토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3국 모두에서 민주화 세력과 노동자 운동 세력은 정치적 제약이 느슨해짐으로써 형성된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여 기반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북아프리카 노조가 최근의 시위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젊은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잠재적 역량이다. 이들 집단의 경우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학자들은 아프리카 노조가 조직률 하락과 영향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들 부문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¹⁹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와 그들의 요구에 대응할 방법을 찾게 된다면 이들 국가의 노동조합은 시위의 주요 세력과의 결합을 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 국가의 노총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은 민주적 형태를 조직화 경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집트와 튀니지의 최근 상황을 보면 노동자 운동의 민주화를 향한 새로운 추동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ETFU의 결성은 이 지역 전체 노동자들에게 고무적인 사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알제리의 독립노조의 경우 최근 대중동원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긴 조직화와 투쟁의 역사를 지닌 알제리 노동자 운동을 이를 통한 교훈을 추출해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최근의 시위는 국제 연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화 시위대와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깃발과 플래카드를 통해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알제리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무라바크가 퇴임하지 불과 며칠 전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연대집회를 벌였다. 이제 상징적 연대를 넘어 실질적 교류를 할 때이다.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독립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 있어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ILO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임시정부에 의한 정책개혁 과정에 개입하였다. ILO의 개입은 노조의 권리, 실업,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에 있어 지원책이 될 것이다. 이들 국가에 있어 이러한 개입이 피할 수 없는 단계이긴 하겠지만, 노동자 운동에 있어 사용자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ILO와 같은 국제기구에 모든 의사결정을 내맡겨서도 안 될 일이다. 노조와 다른 운동세력은 반드시 자신들이 요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주장을 계속 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장기적 관점의 조직화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혁명은 진정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¹⁹ 예를 들면 다음을 보라. Ilda Lindell, “Building Allianc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 Workers: Experiences from Africa,” in Andeas Bieler, et. Al., ed. *Labour and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What Prospects for Transnational Solidarity* (2008).